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보조금 비리·담합 등 수사 대상 추가
‘수사 개시 공소청 통보’ 정부안 폐지
오늘 본회의 ‘공소청설립법’ 함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으로 추진해 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에 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다.

주요 수사 대상은 사기·횡령·자본시장 범죄, 마약 및 방위사업 범죄, 국가 기반 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 범죄 등이다.

이윤리 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법제처와 사건과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국가·지방 보조금 비리 및 담합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수사 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법안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법률 조항을 명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앞둔 검찰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외대)이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관련 조항 등을 삭제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을 조율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확하게 규정해 수사 범위 확장을 제한했다.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행안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지명,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2년이다.

자격 조건은 수사·법률 관련 업무, 판·검사, 변호사,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 등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다.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는다. 공개 채용이 원칙이나 직무 관련 학식·경험·기술·연구 실적 등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

도록 한 정부안 조항은 삭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한 중수청법 6조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행안부 장관은 정치인 출신 내지는 거의 대통령 측근들이 오는데 (장관) 중수청의 모든 인사위원회나 부적격 심사위원회에 장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며 “인사권을 통해 얼마든 수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행안부는 중수청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에게만 대해 지휘·감독할 수 있다”며 “민주적 통제 하에 중수청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법안 의결 직후 “법안이 시행되면 수사와 기소의 완벽한 분리를 통한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권익 보호와 인권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공소청 설치법과 함께 중수청 설치법을 상정할 방침이다.

/김진수 기자

박병규 광산구청장 “재선 도전”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은 18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광산의 미래를 열겠다”며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박 예비후보는 “광산은 더 이상 외곽에 머무는 도시가 아니라 광주의 미래를 여는 중심 도시가 돼야 한다”며 “민선 9기 광산의 방향은 서남권 경제 중심 거점, 일자리 중심 도시, 지속가능한 공동체 도시”라고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는 민선 8기 4년을 ‘구민과 함께한 실현의 시간’으로 규정하며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유치, 광주 민간·공공형 통합 이전 협의, 여동산 관광개발 추진, 광산고등학교 신설 등의 성과를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또 천원 밥상, 1313 이웃살림, 살던집 프로젝트, 동별 미래발전 계획 등 주민 참여형 정책들도 언급하며 “광산의 진짜 힘은 사람과 공동체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예비후보는 “지난 4년 동안 구민



의 참여가 지역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변화의 길을 멈출 수 없다. 광산의 미래, 한 번 더 박병규와 함께 만들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변은진 기자

임택 동구청장, 예비후보 등록...3선 도전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18일 6·3 지방선거 동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날 오후 예비후보 등록으로 임택청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직무 정지 전 마지막 결재는 ‘골목상권 맞춤형 교육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이

었다. 해당 사업은 동구 내 상인 단체를 찾아가 노무·세무·마케팅 등 기초 분야를 맞춤형으로 교육하고 유관 기관과 연계해 상인회 중심의 자발적 상권 관리와 공동 브랜드 기반을 만드는 게 골자다.



임 예비후보는 “지난 8년 동안 골목상권과 문화, 인문도시 정책을 중심에 두고 동구의 변화를 만들어 왔다”며 “동구가 AI 기반 신산업과 골목경제, 문화관광이 함께 어우러진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안재영 기자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실현해야”

지방4대협의체·학계, 재정 분권 촉구
“자주재원 확대·교부세율 인상 절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4대협의체와 관련 학계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자치재정권 확대’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7일 오후 시도지사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위원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및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 1월16일 구성된 ‘법정부 재정분권 TF’의 자치재정권 확대 논의 과정에 국정과제의 본질이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학계의 공동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주민주권 지방정부’가 공존하며, 성숙한 지방자치를 통해 국가발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전환과 지방자주재원 확대를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완성해 오랜 기간 고착된 중앙정부의 재정집권을 확실히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53번)에는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수준 상향 ▲5급3특 지방4대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위원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및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 1월16일 구성된 ‘법정부 재정분권 TF’의 자치재정권 확대 논의 과정에 국정과제의 본질이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학계의 공동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주민주권 지방정부’가 공존하며, 성숙한 지방자치를 통해 국가발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전환과 지방자주재원 확대를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완성해 오랜 기간 고착된 중앙정부의 재정집권을 확실히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수 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